

# 주택가 눈 치우는 장병... 軍, 들쭉날쭉 대민지원 범위 논란

육군, SNS에 대민지원활동 홍보 댓글에 '과도한 대민지원' 쓴소리 현역장교 "장병의 노동력 착취"

"군, 지역 과도 민원요청에 휘둘러 지자체 제공 육성지원금에 눈치"

군장병의 대민지원 범위는 어디까지여야 할까.

지난해 12월 26일 육군은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02기갑여단의 대민지원 활동을 홍보하다가 역풍을 맞았다. 이 홍보물에는 약 1100여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댓글의 대다수는 장병의 노동력을 과도하게 대민지원으로 내몰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시민들로부터 나쁜 반응이 나오자 육군은 102여단이 강원도 속초시에서 대민지원 활동으로 펼친 제설작업은 '생존을 위한 작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군 안팎에서는 '군 당국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대민지원 요청에 휘둘리고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02여단, 왜 개인 집 차고와 인도의 눈을 치웠나

10일 본지는 102기갑여단의 대민지원과 관련된 민원에 대한 속초시의 답변



육군이 지난해 12월 26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102기갑여단의 대민지원활동. 주민 개인이 치워야 할 주택가 앞 인도의 눈을 군인들이 치우고 있다. /편집=문형철 기자

서를 입수했다. 속초시에 해당민원을 보낸 제보자로부터 얻은 이 답변서에 따르면 속초시는 "동별 인구규모와 면적 및 군부대 지원가능능력(연인원 260명)을 고려해,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통해 '주택 밀집단지'의 인도변, 통행로 및 버스정류장 폭설취약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해 제설작업을 진행했다"고 답변했다.

육군이 밝힌 보급선 확보 등 생존을 위한 작전과는 거리가 있는 구역이다.

육군이 공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공개한 대민지원 활동 사진에는 '국가유공자' 및 '독거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약자를 돕는 모습도 있었지만, 대로변 빌라건물 차고 앞과 인도

에 쌓인 눈을 치우는 모습이 더 많았다. 눈이 많이 내리는 영동지역의 특성상, 공무원들도 제설에 앞장서기도 한다. 그렇지만 군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설작업을 펼쳐야 하는 군 보급로와 기동로 및 주요거점 등은 제설장비의 지원이 어려운 곳이 많다. 때문에 군 장병들이 주민들의 집앞까지 눈을 치워주는 대민지원에 나서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102기갑여단과 같이 8군단 소속인 22사단의 경우는 102여단보다 대민지원의 부담이 덜한 것으로 보여진다. 22사단 출신의 예비역 장교와 병은 "눈이 많은 영동지역에서 북부했지만, 주요

거점 등의 기동로 및 보급선의 제설작업도 고된 일이라, 102여단과 같은 대민지원에 나선 적이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과도한 민원요청, 장병 노동력 착취

익명의 육군 현역장교는 "마치 장병들의 의지가 박약해 대민지원을 거부하려한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도 읽었다"면서도 "비현실적 급여와 충분한 지원도 없이 대민지원에 군인을 내모는 것은 장병의 노동력착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설작업에 동원된 장병들에 대한 예산집행과 지원을 묻는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속초시는 "주민센터에 상시 활용

가능한 제설도구(삽, 장갑 및 핫팩 등)를 비치 중이며, 기존 보유량 내에서 군부대 지원병력 수에 맞춰 적절하게 지원했다"면서 "제설작업 지원기간(2021년 12월 26~28일) 예산범위에서 샌드위치·우유·김밥 등 각종 간식을 제공했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영동지역 폭설을 보도한 복수의 매체들은 해당 주민들도 제설작업에 나서면서 눈삽 등의 파손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런 점을 볼 때 장병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밝힌 속초시의 주장은 사실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익명의 영관 장교는 "최근들어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민원요청에 군이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전방사단의 경우 민군상생의 논리에 휘말리고, 후방 지역방위사단은 부족한 예비군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육성지원금에 의존해 눈치를 본다"고 말했다. 이 장교는 "지방자치단체의 대민지원의 요청이 과거처럼 어려운 이웃보다, 시각적 효과가 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부 부대는 태풍으로 어지럽혀진 아파트 단지의 청소마저도 장병을 투입하는 것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문형철 기자 captinm@metroseoul.co.kr

##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시

###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판매가격 협의해야"

공정위,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온라인 매출액 등 가맹점에 제공해야

앞으로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가맹본부는 온라인 제품 판매시 판매가격을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업종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은 최근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매출 하락 등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 매출액 비

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등의 내용이 담긴 정보공개서와 기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에 제공하도록 했다.

특히 가맹점주가 직접 또는 가맹점주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가격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명시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엔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전용상품 출시, 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 도입 등 가맹점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도 포함했다.

가맹점사업자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절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뒀고, 가맹본부가 10년이 경과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지된 평가기준에 미달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갱신토록 하는 조항도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영업 개시 후 1년 간 발생한 월평균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해 가맹점주의 권익이 폭넓게 보호되도록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농식품부, 반려동물 먹거리 등 개발 나서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추진

정부가 반려동물 먹거리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서비스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전주기산업화기술개발 사업'(2022~2026년)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반려동물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2017년 2조 3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수입에 의존하는 반려동물 먹거리의 국산화와 맞춤형 의약품,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기술개발을 추진기로 했다.

올해는 16과제(지정공모과제)에 67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먹거리 분야에선 반려동물 알레르기, 염증성 피부질환 처방식 기

술개발 등을 위해 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및 서비스 개발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맞춤형 진단·치료제, 의료용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을 위해 13개 신규 과제를 지원한다.

자세한 공고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 농림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지원하려는 연구자는 기한 내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포함한 제출서류를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고용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올 산재 사망자 700명대 감축 목표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828명으로 관련 통계 이래 가장 낮았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 700명대 초반까지 감축한다는 정부 목표는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면 올해 사망자를 700명대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재 사망사고 감축 계획을 10일 발표했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7일 중대재해법 시행 후 올해 연말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 초반대까지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2020년보다 54명(6.1%) 감소했다. 임금 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비율인 사고 사망 만인율도 0.43으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였다.

산재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이 4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84명, 기타 227명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는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계기로 산재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주가 사고를 야기한 유해·위험 요인을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 여부가 집중 수사 대상이다.

고용부는 법 시행에 앞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유형별 매뉴얼 등을 현장에 배포해 자율진단을 유도하기로 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이 큰 중소(50~299인) 규모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실시한다.

공공부문의 중대재해 예방도 강화한다. 올해 공공 부문 주요 평가지표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및 안전보건 실적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권 본부장은 "기업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위험의 방치, 안전 수칙과 작업 절차 미준수의 묵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